

민주 “예산안, 정부여당 대통령실 눈치만...협상 임하라”

이재명 “관심 기울일 건 민생 그 자체” 박홍근 “與 협상 전권 안 주고 주문만” “부자 포퓰리즘”, “가진 자 따뜻 예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생 예산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보자 감세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과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는 끝나야 한다”며 “여당은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인가.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 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개탄했다.

이날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지경”이라며 “당정 협의에서 예산안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명령만 내리면 그만이고 관찰하는 건 여당 몫인가”라고 했다.

또 “여당에 협상 전권은 주지 않고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막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쫓겨다니 말고 즉각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으며, 국회의장에 대해선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00여 개 초거대 기업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기세를 노인 일자리, 임대주택, 지역화폐 이런 것들을 위해 보여줄 수는 없다”며 “부자 포퓰리즘을 버리고 나라 살림을 챙기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난방비 아끼려 수면양발을 신고 난방 텐트에서 자는 게 우리 주변



변 평범한 청년들이 겨울을 지내는 모습”이라며 “가진 자들에겐 한 없이 따뜻한 윤석열 정부가 비정한 예산으로 더 이상 국민을 추위로 내몰지 말라”고 했다.

이외 서은숙 최고위원은 정부 노동 정책

기조에 대해 “재벌 대기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자와 약자를 억압하며 한국 사회를 기득권과 특권층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이슬기자



감사원,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감사 착수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맡았다는 의혹 등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19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

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맡은 업체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기재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업무실과 관저 이전 비용 및 계약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비용 책정과 집행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감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민주, 박지원 복당 승인...“대승적·대통합 차원 결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복당을 대통합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국정원장 복당이 허용됐다.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최고위에서 복당 논의가 5번째까지 이어졌다. 찬반이 팽팽해 결정을 못했는데 오늘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의 복당을 수용하란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국정원장 복당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보류한 바 있다.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어 논의를 거친 뒤 가부

를 결정하겠다는 게 지난 최고위 후 입장이었다.

박 전 국정원장 복당과 관련해선 관련 당헌 당규를 엄격히 마련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대선 때 폭넓게 문호 개방했던 것을 상기하란 견해가 대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전 국정원장 복당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경유로 과거 박 전 국정원장 행보를 짚으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전 국정원장 복당에 대한 최고위원 찬반 의견은 동수였다고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

지도부 팽팽한 찬반 대립 속 수용

대표가 '대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국정원장을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최고위원들이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복당 결론 후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복당에 줄곧 반대했지만 이 대표의 대통령, 대승적 결단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대표 결단과 제안에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 또한 “지난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탈당한 많은 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민주당 단일대오 형성에 박 전 국정원장도 가야할 단 한 분에 있어 당대표가 결정하고 최고위원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박 전 국정원장 복당 관련 후속 절차에 대해선 “오늘 (복당 결정이) 됐으니 행정적 절차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선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민 의원 복당 여부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한 인사다. 이후 당내 일각선 그의 복당 논의 주장이 있었으며, 정 최고위원도 박 전 국정원장보다 민 의원 복당 논의를 우선해야 한단 취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